

<요 약>

1.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

- 현재로서는 김정일이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.
 - 북한내 김정일 반대파들도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, 중국의 강력한 관심 표명으로 볼 때 김정일 체제는 중단기적으로(1-2년) 유지될 수 있을 것임.
- 김정일 체제(단독 또는 집단지도체제)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은 약 60%임.
 - 김정일과 테크노크랫 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집단지도체제도 가능
 - 김정일 체제하에서의 정책 방향은 제한된 개혁 개방 혹은 점진적 개방이 될 것임.
- 개혁파가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집권한다면 중국식 경제개방을 추구할 것이나, 강경파의 집권 혹은 주민 반란에 의한 체제 전복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임.

2. 남한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

- 국내정치의 단기적 현안인 보궐 선거, UR 비준, 노동법 개정/노사분규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나 다소 여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.
 - 북한정권의 안정성 여부가 문제될수록 여권의 입지 강화.
- 남북관계는 김정일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임.
 - 강경파가 정권을 획득하지 않는 한, 북한은 김일성이 남긴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내적 단합을 꾀하는 한편, 대외적 유화조치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 및 북·미고위급 회담의 재개를 희망할 것임.

3. 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남한의 국가위험도 증가는 단기적으로 남한의 거시경제변수에 일시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 - 그러나 단기 파급 효과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사태 진전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.
- 중장기 파급 효과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대외 개방 정책의 향방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임.
 -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남북경협을 확대해 이어지는 경우,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분업체계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.
 - 이번 사태는 통일 준비에 대한 민간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, 정부의 장단기 경제·산업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.

4. 현대 그룹에 미치는 영향

- 북한의 개방 정책은 중화학 공업 및 건설 위주의 업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현대 그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.
 - 북한의 수입품목은 단기적으로 생필품이 주가 될 것이나 점차 내구 소비재, 제철·유화·정유, 기자재 부문의 수요도 급증할 것임.
 - 또한 북한의 SOC확충에 따라 중공업 부문에서의 대북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임.
 - 북한의 자금 결제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물물교환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I. 후계구도의 전망

1. 김정일 체제 등장

- 김정일이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.

2. 반김정일 체제 등장

-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.
- 이것은 김일성이 자연사가 아니고 내부 정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음.
- 내부 정변은 최근 김일성이 보여준 핵문제와 대남정책에 대한 타협적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일부 군부 강경파에 의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됨.
- 이 경우 7월 17일 장례식이 끝난 후 치열한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임.
- 새로운 정권의 성격은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며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에 들어갈 것임.

3. 판단컨대, 김정일이 정권을 인수한 후 중·단기적으로는(1-2년) 김정일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.

- 김정일 정권이 단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
 - 김정일은 1973년부터 이미 후계자로 지명되어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음.
 - 최근 1993년 4월에 국방위원장에 임명되어 군통수권자로서 군을 장악해 왔음.
 - 최근까지 김정일이 당과 정에서는 김일성 다음의 2인자 자리를 유지해 왔음.
 - 김일성 사후에는 장례위원회위원장으로서 북한내 서열 1위로 부상됨.
 - 북한내 김정일 반대파들도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체제유지를 위해 김정일 체제에 반발하지 않을 것임.

II. 김정일 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시나리오

- 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김정일 체제의 장기적 전망

시나리오	체제의 성격	체제 안정도	정책방향	실현 가능성
1	단일지도체제	안정	현체제유지 - 제한된 개혁개방정책	35%
2	집단지도체제	안정	점진적 개방정책	25%
3	강경파의 집권	불안정	내부긴장 고조 - 전쟁도발 가능성	15%
4	개혁파의 집권	불안정	중국식 경제 개방	20%
5	주민반란에 의한 체제 전복	불안정	체제붕괴, 난민발생	5%

김정일 체제의 장기적인 전망에 관한 시나리오

1. 시나리오 ①: 단일지도체제 - 제한된 개혁개방정책
 - 장기적으로도 주변 강대국 특히 소련과 중국은 김정일 후계체제 인정.
 - 일본도 한반도 안정화 유지라는 차원에서 후계체제 인정.
 - 미국도 핵문제 투명성과 후계체제 인정을 서로의 카드로 교환할 수 있음.
 - 김정일은 이미 20년 전부터 후계자로 지목되어 후계자수업을 하였고 그 동안에 많은 세력들이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함 (특히 오진우, 최광으로 대표되는 혁명 1세대들이 그러함).
 - 김일성의 노선을 답습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의 제한된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할 것임.

2. 시나리오 ②: 집단지도체계 - 점진적 개방정책

- 현재 북한에는 김달현, 강성산, 김용순 등의 테크노크랫 세력이 존재.
- 현재 북한 주민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김정일이 연합하여 권력을 공유하는 집단지도체제 가능.
- 제한된 개방화보다 더 나아간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임.

3. 시나리오 ③: 강경파 집권 - 내부긴장고조/전쟁도발 가능성

- 현재 북한에는 김광진 등 강경파 혁명 1세대들이 김정일에게 반발하고 있음.
- 이들이 김정일 정권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.
- 이 경우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 고수를 위한 폐쇄정책을 실시할 것임.
- 북한핵문제가 악화되어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것임
- 남북관계는 긴장되고 전쟁의 가능성도 있음.
- 이 경우 장기적인 체제 유지가 어려워짐.

4. 시나리오 ④: 개혁파 집권 - 중국식 경제개방

- 테크노크랫 세력이 경제난 악화를 구실로 김정일 체제에 반발할 가능성.
- 군부의 40대 50대의 해외유학파들이 러시아나 동구의 개방을 모방한 경제개혁을 주장하며 김정일 체제에 도전할 것임.
- 군부내의 개혁파와 테크노크랫의 연합이 예상됨.
- 이 경우는 두 세력간의 절충으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중국식 개방정책을 실시할 것임.

5. 시나리오 ⑤: 주민반란 - 북한체제붕괴

- 현재 북한에는 식량난이 극심하여 김일정보다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이 경제적인 위기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.
- 이 경우 체제가 붕괴하고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것임 (중국, 일본, 남한 등에 난민유입 가능성).

III. 정치적 영향과 대응

1. 국내정치의 단기적 현안에 대한 영향

(1) 보궐선거

- 남북 정상회담이 7월 25일로 정해지면서 8월 2일로 정해진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인기가 상승하였음.
-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8월 2일 이전에 성사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보궐선거의 호재가 하나 없어짐.
- 그러므로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되었을 때보다는 여당이 다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.
- 그러나 7월 17일 김일성 장례식 직후에 북한체제에 혼란이 온다면(김정일 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의 등장),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의 안정을 바랄 것이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익을 볼 것임.

(2) UR 협정

- 정부는 의회에서 UR협정서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UR 비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었음.
- 김일성의 사망으로 UR 비준에 대한 반대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.
- 그러나 이것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기 전 상황보다는 악화되지 않을 것임.
- 오히려 남북문제가 크게 쟁점화 됨으로써 UR 비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음.

(3) 노사분규/ 노동법개정

- 노사분규도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었을 때처럼 완화되지는 않겠지만, 상당한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북한정권이 불안하면 할수록 남북관계가 쟁점화되어 노사분규는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.
- 그러므로 북한정권이 불안할수록 야당안 보다는 여당이 발의한 노동법개정안의 통과가 유리할 것임.

(4) 재야세력

- 재야세력은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었을 때처럼 약화되지는 않겠지만, 상당한 정도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북한정권이 불안하면 할수록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재야세력의 활동이 줄어들 것임.

2. 남북관계

(1) 남북관계의 단기적 변화

- 남북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소강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.
- 북한은 내부문제에 몰두하기 때문이며 남한 정부도 실세가 확정될 때까지는 관망할 수밖에 없음.
- 남북정상회담:
 - 북한은 북한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개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.
 - 남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실세가 드러날 때까지는 관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때까지는 정상회담을 연기할 것임.
 - 김정일은 정권을 인수하면 대외적인 체제 인정을 받기 위해 북미 고위급회담 뿐만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재개도 바랄 것임.
 - 남한 정부는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경우 회담의 파트너로서 김정일을 인정하느냐 여부로 심사숙고할 것이나 국내외 정치 상황(북한핵, 한미관계, 국내의 여당주도 정국)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정상회담을 재개할 것임.
 - 강경파가 빠른 시일내에 정권을 획득한 경우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- 단기적인 전쟁 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음.
 - 전쟁은 김일성이 내부정변에 의해 피살되고 북한 내부가 혼란에 빠진 경우에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도 희박함.

(2) 남북관계의 장기적 변화

- 시나리오 1: 김정일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김일성 노선을 답습하여 제한된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할 것이며, 남북관계는 과거와 같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.
- 시나리오 2: 개혁파와의 집단지도체제는 개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시나리오 1보다는 더 진전될 것임. 특히 경제부문의 관계개선이 두드러질 것임.
- 시나리오 3: 강경 파격파의 집권이 이루어질 경우, 남북 관계는 급속히 긴장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.
- 시나리오 4: 온건 개방파의 집권은 남북 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, 통일의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큼.
- 시나리오 5: 사회적 혼란에 의해 북한 체제가 와해될 경우, 돌발적인 흡수통일.
- 통일시기: 일단 통일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지만,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데에 있음.
 - 시나리오 1: 김정일 단일체제가 굳어지는 경우는 통일 논의는 매우 점진적으로 논의되고 통일까지는 상당한 기간(10년 이상)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.
 - 시나리오 2: 점진적 개방정책을 통해 남북교류가 확대되어 통일의 시기가 시나리오 1보다는 앞당겨질 것임 (8년 정도).
 - 시나리오 3: (강경파 집권) 긴장 고조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통일 가능성이 있으나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은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임. 그러나 강경파 정권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것

이므로 체제붕괴를 가져와 오히려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음.

- 시나리오 4: 통일 시기는 상당히 단축되어 3, 4년 안에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시나리오 5: 북한체제가 와해되는 경우 동서독과 같은 급격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음.
- 장기적인 전쟁 가능성: 시나리오 3에 의한 군부강경파의 집권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나 이것도 시나리오3 자체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함.

3. 북한 핵문제 및 북미 관계에 대한 단기적 전망

- 단기적으로 북한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낙관적 전망은 일단 수그러질 것임.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안정되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, 또한 북미관계도 호전될 가능성이 높음.
- 북미 회담은 7월 9일 현재 일단 중단된 상태이나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.
- 미국측은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시기가 8월말이기 때문에 늦어도 8월말까지는 회담을 재개하려는 입장임.
- 북한측도 김정일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북미수교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회담을 재개하려고 할 것임.
- 만약 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측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, 핵문제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.
- 북미관계는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측 입장: 북한핵의 투명성을 보장받기위해서 김정일 체제를 인정할 것이며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임.

- 북한측 입장: 경제 회복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. 남북정상회담도 결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음.
- 단, 과거 강경파가 집권하는 경우는 상당히 북미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임.

4. 정책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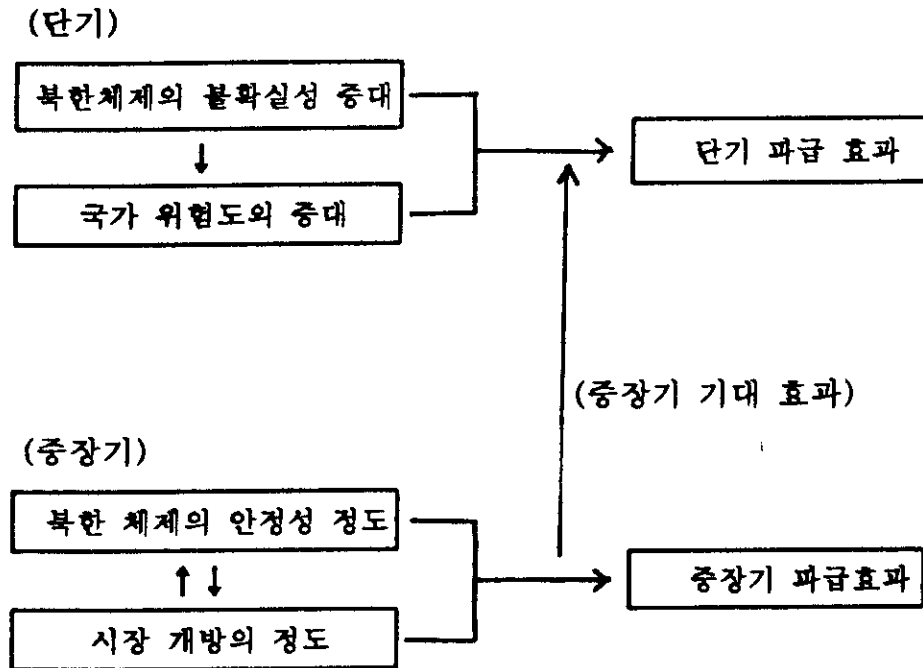
- 앞에서 살펴 본 북한의 후계 구도 시나리오 5개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번이었음.
-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4번이 가장 바람직하나,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2번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함.
- 김정일 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하여 북한 정권의 강경화를 막아야 함.
- 체제의 공고화를 원하는 김정일은 자신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할 것이므로, 우리측도 이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회담의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김정일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경제난을 극복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,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을 바랄 것임. 따라서 우리 정부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하여 서방 선진국들이 북한과의 경협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도록 노력함과 동시에, 북한이 남북경협에도 적극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줄 것을 미국과 일본 등에 요구해야 할 것임.
-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증진시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증대해야 함.
- 중국은 북한과는 김일성 정권때부터 빨치산 1세대들간의 인적유대로 강한 연대외식이 있었고,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

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임.

- 중국은 김정일 체제를 인정할 것이며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유도할 것임.
- 그러므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을 앞당기도록 유도해야 함.

IV. 경제적 영향과 정책 대응

1. 개관



-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빚어진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의 관련한 국가위험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일시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- 그러나 단기 파급 효과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사태 진전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.
- 중장기 파급 효과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임.
- 현재 시점에서 판단컨대,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체제기반 강화를 위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이

과정에서 북한의 부분적인 경제 개방(이들테면 경제특구의 활성화)을 확대시켜가는 것임(시나리오 2).

-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남북경협을 확대하여 이어지는 경우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.
- 한편 이번 사건은 통일 준비에 대한 민간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의 장단기 경제·산업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.

장단기 파급효과 요약

	파 급 효 과	가능성
단기	- 가격변수의 일시적 교란 • 중시 불안 및 주가의 변동성 증가 • 물가 불안 •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 증가 - 노사분규의 일시적 진정	
중장기	시나리오 1: 경제 안정과 시장 개방 - 남북경협을 확대 • 수출입 및 산업구조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 • 노동시장에 직간접적 영향 -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상승기조 부추김	25%
	시나리오 2: 경제 안정과 제한적 시장 개방 - 남북경협을 토대 마련 - 경기 상승기조에 도움	34%
	시나리오 3: 경제안정과 폐쇄·자립경제 - 기존의 남북 대치상황이 유지되면서 국내 경제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임.	1%
	시나리오 4: 경제 불안정 - 국가위험도의 급증 • 해외자금차입의 애로 및 차입금리 상승 • 수출입에 부정적 효과 - 국제원유가의 상승 - 투자 및 수출입에 영향을 통해 경기기조에 부정적 효과	40%

주: 각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2쪽의 표 참조

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요약

	대응 방향	
	정부	기업
단기	- 가격 변수의 안정화 · 물가, 금리, 환율등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 방지 - 경기상승 기조 유지	- 정확한 정보의 습득 - 투자시기의 신중한 선택 -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
중장기	(시나리오 1-2) - 통일비용의 극소화 · 재원 마련 · 북한의 SOC투자지원 - 남북교역의 활성화 · 자유무역 협정 체결 · 휴전선 부근에 자유무역지역 설치 - 북한의 경제력제고 우회적 지원 - 북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- 경제 및 산업정책의 수정	- 남북 교역 확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 · 투자 품목, 투자 유망지 선정 · 투자 위험의 분산 강구 - 정부 정책 변화를 고려한 경영 계획의 수립 - 한중 합작에 의한 북한 진출
	(시나리오 3) - 북한의 개방 유도	
	(시나리오 4) - 북한체제 안정화를 위한 경제 지원 - 경기활성화 대책	- 원자재 확보

-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정부의 해외 투자 기금과 경험 기금의 확대가 필요함

2. 단기 파급 효과

- 김일성 주석의 죽음은 단기적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위험도를 증가시켜 한국 경제에 다소 부담스러운 효과를 빚어낼 것임.
-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하락과 변동성 증대가 예상된다.

- 초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것임.
- 이후에는 상황 변동에 따라 주가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.
- 기업 투자는 심리적 위축으로 신규 투자가 당분간 지연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.
- 금리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됨.
 - 상승 요인으로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심리적 효과가 있음.
 - 하락 요인으로는 기업의 투자 지연에 의한 자금 수요의 감소가 있음.
 - 정부의 통화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금리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물가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.
 -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증대되어 생필품의 가수요가 예상됨.
 -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.
- 대외 부문에서는 국가 위험도의 증대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.
 - 해외 차입 금리의 상승.
 - 해외차입이 어려워지고 한국에 대한 장단기 투자가 감소할 것임.
 -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출 애로 및 수입 조건 악화.
- 남북한간의 상황이 도출해내는 사회적 긴장감에 의해서 노사 관계는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.

3. 중장기 파급 효과

- 이번 사태로 정부의 중장기 경제 및 산업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하반기 및 95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는 이번 사태의 가능성이 전

- 허 고려되지 않았음.
- 또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남북한 관계에 대한 변화가 고려되지 않았음.
- 북한의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조만간 정부의 정책 조정이 예상되며, 이에 따라 향후의 경제 상황이 변화할 것임.
-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재원을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.
- 통일 준비에 대한 민간 여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산될 것임.
-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난민의 대량 발생도 가능할 것임.
- 대북 투자나 교역은 북한의 구매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.
-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무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
- 민간 차원에서는 대북 투자를 활성화하고 북한 노동력의 고용 등을 통해 북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키워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.

시나리오 I - 체제 안정 및 완전 개방

A. 경제 상황 전망

- 남북 경험의 활성화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이 전망됨.
- 증권 시장은 활황 예상
 - 정치적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고 평화적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날 것임.
 -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량 유입될 것임.
- 투자는 활발히 진행될 것임.
 - 기업은 대내 및 대북 투자를 동시에 큰폭으로 확대할 것임.

- 정부의 대북 지원 및 투자 역시 증가할 것임.
- 국가 위험의 감소로 자본수지가 개선되고 해외 차입 금리가 낮아질 것임.
- 환율은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의 개선과 국가 위험도의 감소로 절상될 가능성이 있음.
- 남북 경협 확대는 수출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.
 -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역 확대로 수출입이 증가할 것임.
 -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접목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- 남북 경협 확대는 산업구조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.
 - 단기적으로는 경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북 투자가 증가할 것임.
 - 장기적으로는 일부 노동집약형 중공업 부문과 북한의 천연 자원을 활용하는 중공업에 대한 대북 투자도 활성화될 것임.
 - 경쟁력을 잃어가는 남한의 일부 경공업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.
-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요구가 커질 것임.
- 노동 시장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.
 - 남북한간의 산업구조 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의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됨.
- 한중 합작 대북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임.

B. 정부의 정책 방향

- 사회간접투자 정책 수립에 북한을 고려해야 할 것임.
 - 북한을 고려한 전 국토의 균형된 사회간접투자 확대
 -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 시기 조정. (북한은 지불 능력이 없으므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.)
- 대북 투자 및 지원 자금의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.
- 산업구조 정책의 조정
 - 산업구조 정책의 방향 전환
 -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산업구조 조정 속도의 완급 조절.
- 남북한간의 상호 경제 의존도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.
 - 남북 경협에 있어서 일본 등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'남한이 주도권을 잡아야함.'
 - 남북한 자유무역지역 조약의 체결.
 - 휴전선 지역에 자유교역 및 투자 지역 설치.
 - 기업의 대북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특수지역 투자보험제 실시.
- 북한의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회적 방안 강구.

시나리오 II - 체제 안정 및 제한적 개방

A. 경제 상황 전망

- 이 경우는 북한이 완전 개방을 실시하는 경우보다 강도는 비교적 작을 것이나,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.
 - 대내적으로는 경기와 주식시장의 활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임.
 -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험도가 하락하면서 해외자본 유입의 확대, 해외 저리자금 조달의 용이, 수출입의 활성화 등이 예상된다.

- 남북간의 교역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위주의 형태에서 중공업 부문까지 확산될 것임.
 - 기존 경공업 품목 수출 및 지하자원 수입의 형태는 확대될 것임.
 - 대북 수출은 초기에는 생필품이 위주가 될 것이나 점차 텔레비전 등과 같은 소비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임.
 - 북한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생산 시설 및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필요는 중공업 상품의 수출을 유발할 것임.
 - 북한의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경공업 제품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임.
-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산업 구조와 분업 구조의 조정이 필연적일 것임.
 - 산업구조는 경공업 부문은 북한으로 이전되고 남한 산업은 중공업 위주의 형태가 예상됨.
 - 생산요소의 분업은 '북한 노동, 남한 자본'의 결합이 예상됨.
 - 한편 장기적으로는 남한 기술 개발, 북한 생산의 분업 형태도 가능함.
- 남북간 경험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서 활발한 양상을 보일 것임.
 - 경제 특구 투자는 비교적 소규모이고 손쉬운 경공업 부문(특히 노동집약적 산업)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임.
 - 장기적으로 대북한 투자의 안전성이 개선되는 경우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중공업 분야도 유망해질 것임.

B. 정부의 대응 방안

- 정부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는 통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북 경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.
 - 단기적으로 생필품 위주의 유·무상 지원.
 -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 강구.

- 남북한간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.
 - 한국 경제 발전과 남북한 경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 수립이 요망.
 - 남북한 투자자유지역 협정의 체결로 비관세 무역 실시.
 -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노동력을 북한 노동력 활용으로 대신하는 방안 마련.
 - 이외에도 육상 무역자유지역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임.
- 통일에 대비하는 거시적 장기적 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.
 -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등 재원 조달 방안.
 -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공기업 민영화 계획 재검토.

시나리오 III - 체제 안정 및 폐쇄 (북한의 자립 경제)

A. 경제 상황 전망

- 기존의 냉전 체제가 유지되면서,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.

B. 정부의 대응 방안

- 북한의 경제적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.

시나리오 IV - 체제 불안정의 경우

A. 경제 상황 전망

- 이 경우 대내적으로는 안보비용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.
 - 국방비 증액, 외환 보유고 증대, 비축 원유 확대 등의 필요.
 - 국방 이외의 예산 축소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애로 발생.
 - 정부 자금 수요 증가로 시중 자금 경색.
 - 물가 상승 압력 증대.

- 국가 위험도의 급격한 증가.
 - 해외 자금 차입의 애로 및 장단기 대한국 투자 감소.
 - 해외 차입 금리 상승.
- 국제 원유가 상승.
 - 전쟁 가능성 증가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원유 비축량 확대로 국제 원유가 상승.
- 북한의 정정 불안이나 식량난 등에 따라 대규모 난민 발생 가능성 증대.
- 북한이 체제 불안정하에서도 개방 정책을 실시할 경우 한국의 경제 부담 가중.
 -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에 따라 미국, 일본 등 제3국의 대북 경험은 소극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큼.
 -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비용도 미국이나 일본 등이 한국측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농후함.

B. 정부의 대응 방안

-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경제 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개방 정책 유도.
- 북한 정권이 개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협력을 주도.
 - 남북한간의 역할뿐만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제3국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임.
- 한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쟁 발발 가능성 최소화.
- 대규모 북한 난민 발생시 외국(특히 일본)의 도움없이 남한 정부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준비 필요.

4. 현대 그룹에 미치는 영향

- 북한의 개방 정책은 현대 그룹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임.
- 중공업 및 건설 위주의 업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현대 그룹은 북한이 개방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보다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임.
- 반면에 북한의 대남한 수출은 경공업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대 그룹과 경합되는 부분이 비교적 적을 것임.
- 완전 개방 정책 실시의 경우
- 현대그룹이 북한 진출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며, 중공업, 건설 위주의 현대 그룹 거의 전 업종이 효과를 볼 것임.
- 단, 북한의 결제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물물교환 등 비통화 결제방법에 관한 연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.
- 북한의 수입 품목은 단기의 생필품 위주에서 전화기, 텔레비전 등 소비재로 전환이 예상됨.
- 북한은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재, 건설 기자재(예: 기차, 발전설비, 중장비, 승·상용차 등)의 수입을 늘릴 것임.
- 경제 발전에 따라서 제철, 유화, 정유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.
-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등 민간부문 건설 수요도 증가할 것임.
-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건설, 중공업 등의 참여 기회가 많을 것임(이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제공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임).
- 남북간 교역량의 증가는 남북간 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 및 해상 운송 수단의 증대를 유발할 것임.
- 북한의 항만과 풍부한 산업 입지,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대규모 노동집약적 사업의 대북 진출이 유망함.

- 제한적 개방 정책 실시의 경우

- 대북 투자 및 수출의 호기임.
- 다만 효과의 강도는 완전 개방의 경우보다 작을 것임.
- 다른 효과는 모두 완전 개방의 경우와 같으나,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같은 북한 정부의 발주 사업과 민간부문 건설 사업 등의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임.
- 북한의 수입 품목은
 - ① 생필품
 - ②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재, 건설 기자재 (예: 기차, 발전설비, 중장비, 승·상용차 등)
 - ③ 제철, 유화, 정유등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임.
- 시간이 지나면서
 - ④ 전화기, 텔레비전 등의 소비재 수입도 증가할 것임.
- 대북 투자로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만과 풍부한 산업입지,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대규모 노동집약적 사업이 유망함.